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 -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①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②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③ 일·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④ 생애 이모작 촉진 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편집자 주]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별 추진 주요 내용 추진 과제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확산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 고용확대형 재정·산업정책 등 추진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하도급 근로자 합리적 보호 근로자의 기본권의 보장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마련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확대 부분육아휴직제도 도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 제정
생애 이모작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 지원 고령자 명칭 변경 및 연령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선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산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①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 기업 등의 범국민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평가·우대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하여 12월에 포상키로 했다.

또한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이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조세·산업·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10.7.21)을 계기로 쟁점화된 사내 하도급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조치하고 직접 고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노무비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특히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온 주 40시간제를 내년 7월 1일부터는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돼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되도록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先적립·後사용),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先사용·後적립)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한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32개 파견 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있게 조정할 예정(신설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 추가)이다.

③ 일·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형 중심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11년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육아나 질병 등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하여 육아기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시급한 수요가 있으나 정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지원을 위한 탈수급상담원,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시간제 직업상담원 등

④ 생애 이모작 촉진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1/2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백만원)을 지원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장려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국민인식에 맞추어 현재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 베이비부머 전문인력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금년말에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 보다 일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09년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28만명)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0.7%(0.2만명)에 불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별 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11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10.11월) 여기에는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면서 향후 국가고용전략의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나감과 동시에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전직 지원장려지원금 요건 완화

